

부문별 주요동향 (11.18~12.23)

1. 대내경제	43
『로동신문』, 규격화 강조	43
‘연료·연소기구 전시회’ 개최	44
최현구 부총국장, “개성공단,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에 기여”	43
평양정보센터, 인터넷으로 제품 판매	44
『민주조선』, 지방예산제 강화를 위한 요구 제시	44
남포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	45
백마-철산 자연흐름식 수로 공사 30% 완성	45
국제통신국, 국제 이메일 서비스 개시	45
2003년도 공업부문, 생산정상화 부진	46
평양식당, 자율가격 등장	46
휴대전화 가입, 2만대 돌파	47
11월말 현재 인민생활공채 연장 판매	47
『중앙방송』, 전력소비기준 준수 당부	47
통일부, “북, 2003년도 에너지난 확보에 부심”	48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 채택	50
북 재정성 부국장, 인민생활공채 설명	50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발전소건설사업 현지지도	51
항구 화물처리 능력 증대에 총력	51
『조선신보』, “7·1조치 생활력 검증”	52
평양에 대형 상품광고 등장	53
2. 농업 및 식량	53
니가타, 대북 쌀 50톤 지원	53
미, 2003년 대북지원 최대	54
중국서 곡물·가축 수입 급증	54
OCHA, 대북 식량지원 호소	55
UNIDO, 북한 식량증산사업 지원	55
UN 관계자 “북 경제정책, 도시 빈민층 100만명 양산”	56
제32차 FAO 총회 참가·연설	56
FAO·WFP, 2004년 북한 구호사업 승인	57
3. 대외경제	57
UN, 묘향산보호기금 100만달러 지원	57
북·베트남간 규격화·계량·품질관리 협조협정 조인	57

EU, 북한에 450만유로 지원	58
북·중 슬레이트 공장 공동 생산	58
러 전력회사, 북과 전력수출 논의	58
TSR·TKR 연결, 북한 현장조사 실시	58
북한선박, 일본 입항 대폭 감소	59
중, 대북 국경무역 급증	59
북, UNIDO총회서 '에너지지원' 강조	59
북, IT분야서 국제협력 강조	60
중 다칭-북 안주 송유관 확인	60
북한-러시아, 송전선 건설 문제 논의	61
남·북·러, 공동전력망 구축 협의	61
중 투먼-북 온성 관광선로 개통	61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62
현대아산, 개성공단 초대이사장에 김고중 현대아산 특보 내정	62
남한, 북측에 폭약자재 전달	62
우리은행, 북한과 코레스 계약 주춤	62
통일부, 현대 개성공단 '중기관리사무소' 설치 승인	62
인천항 대북교역량 크게 증가	63
2003년 남북협력기금 대출 증대	64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	65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	66
2003년 대북식량차관 전달 완료	66
통일부, 1~11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66
제4차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개최	67
5. 남북대화 및 대북정책	69
남북출입관리사무소 12월 중순 가동	69
면회소 설계·착공비용 협력기금 지원 의결	70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북한 국내법 적용	70
6. 북한·주변국가 관계	71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 공식발표	71
미 상·하의원, 북 관련 법안 상정	71
한·미·일 2차 6자회담 공동발표문 합의	72
경수로의정서 이행 불투명	72
경수로현장서 우즈베키스탄 인력 안전 철수	73
북한-아일랜드 외교관계 수립	73

1. 대내경제

「로동신문」, 규격화 강조

11월 18일 「로동신문」 논설은 규격화란 과학기술과 생산을 연계시키는 기준이며 이를 통해 현대과학기술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고 보도. 신문은 “규격은 사람들의 생산활동에 대한 과학기술적 측면과 생산경제적측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기준을 법적으로 규제한것이며 이 합리적기준을 광범한 범위에서 집행해나가도록 장악, 통제하고 관리하는 과정이 곧 규격화 과정”이라면서 이는 “과학기술활동과 생산경영활동을 결합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있으며 그 집행관리과정으로서의 규격화는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영역에서 하나의 독자적인 구성부분을 이루고 전반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 규격화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규격화사업자체가 전사회적, 전 국가적범위에서 최대한의 경제적효과성을 얻기 위한 사업인것만큼 이 사업에는 마땅히 경제지도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물론 현장기사, 공정원, 품질감독원과 생산로동자들을 비롯한 평범한 대중이 참가해야 한다”고 덧붙임(「로동신문」, 11. 18).

‘연료·연소기구 전시회’ 개최

11월 19일 「중앙통신」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주민용 연료 및 연소기구 전시회가 17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전시회에 새로운 연소기구 및 장치 20여가지가 출품된 가운데 “화로식 불판 곤로, 열복사체식 착화탄 곤로, 가정용 메탄가스 곤로, 태양열 식료품 가열기, 태양열 온수기 등은 가정들에서 연료를 효과적으로 리용하고 절약하는데서 의의가 크고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하여 참가자들의 좋은 평을 받았다”고 통신은 전함(「중앙통신」, 11. 19).

최현구 부총국장, “개성공단, 민족경제 균형적 발전에 기여”

11월 21일 「조선신보」는 최현구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이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개성공업지구건설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서 공단의 운영방식과 의의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 최현구 부총국장은 “개성공업지구는 북과 남이 합의한 법에 따라 운영되는 지구이다. 2002년 11월 발표된 개성공업지구법에 따라 개발자가 추천하는 성원들로 현지에 공업지구관리기관이 조직되고 평양에 있는 중

양공업지구지도기관이 이를 지도하게 된다”고 개성공업지구의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 그는 또한 “개성공업지구건설과정을 통해 북과 남은 서로의 화해와 협력·신뢰를 공고히 하며 온 겨레의 통일열기를 더욱 북돋아주게 될 것이다. 개성공업지구가 완공되면 동북아시아의 경제중심지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임(『조선신보』, 11. 21).

평양정보센터, 인터넷으로 제품 판매

11월 21일 『연합뉴스』는 평양시 보통강구역에 있는 평양정보센터(PIC)가 해외에서 웹 사이트를 개설하고 자사 제품을 홍보 판매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 PIC는 싱가포르에서 웹 사이트(www.pic-international.com)를 개설해 전자출판 프로그램(단군, 창덕, 서체집 등), 설계 프로그램(산악, 무지개 등),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조선의 역사와 민속, 맑은 아침의 나라 조선, 삼천리 등) 등을 판매 중임. PIC는 “그동안 해외로부터 많은 프로그램을 주문 접수해 구매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만족시켰다”면서 “해외의 정보기술개발 관련 기업과 연구업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관심을 기대한다”고 밝힘(『연합뉴스』, 11. 21).

『민주조선』, 지방예산제 강화를 위한 요구 제시

11월 26일 『민주조선』은 지방예산제 실시 30주년을 맞이하여 지방예산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예산수입과 지출을 늘려야한다고 보도. 지방예산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첫째 “지방산업공장들을 잘 돌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군마다 조성한 재배원료기지면적을 더 늘이고 그 리용률을 높이며 유휴자재수매사업을 강화하여 지방산업공장들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해주어야 한다”, 셋째 “상업, 급양, 편의봉사활동을 적극 벌이는것이 중요하다”, 넷째 “지방 무역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농업생산을 발전시켜야 한다”, 다섯째 “해당지역에 있는 큰 규모의 공장, 기업소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 한편 지방예산 지출을 바로하기 위해서는 “지방공업을 현대화하기 위한 기본건설 및 대보수자금을 계획대로 제때 보장하여야 하며 지방공업과 농업생산을 늘이고 과학기술발전과 도시경영사업, 국토관리사업을 비롯한 지방경제발전을 위한 인민경제사업비를 원만히 보장하는 방향에서 예산지출을 하여야 한다”면서 이와 함께 “여러가지 인민적시책비와 사회문화사업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신문은 전함. 아울러 “지방예산 집행에 대한 총화와 통제사업을 잘하는 것은 지방예산제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라고 덧붙임(『민주조선』, 11. 26).

남포항 컨테이너 부두 건설

11월 27일 『연합뉴스』는 『중앙방송』을 인용, 북한이 남포항을 확장하고 컨테이너 부두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 『중앙방송』은 27일 “남포항 부두 확장공사에 나선 서해 항만건설사업소 일꾼과 노동자들이 짐함(컨테이너)부두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면서 “대동강 하류에 새롭게 건설중인 짐함부두는 나라의 해상운수 발전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고 평가. 방송은 이어 80톤급과 130톤급 크기의 기중기가 부두에 설치되어 있다고 언급(『연합뉴스』, 11. 27).

백마-철산 자연흐름식 수로 공사 30% 완성

11월 28일 『조선신보』는 백마-철산 자연흐름식 수로공사가 2003년 3월 착공식을 실시한 이래 11월 현재 30%의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 신문은 백마-철산 수로가 “백마저수지로부터 평안북도내 피현, 룡천, 염주, 동림, 철산의 5개 군의 22개 리와 신의주시의 일부를 통과하여 철산군 오봉리와 룡천군 장상리로 각각 흘러드는 물길”이며 “총길이 279.2km(간선 102.1km, 지선 177.2m)로 4만6,000정보의 논과 밭을 적시게 된다”고 설명. 아울러 이 수로로부터 농산물 10여만톤의 증산효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한편 농업성 물길건설관리국 김명철 부국장은 백마-철산물길이 완공된 후 황해북도에 리상-미루벌관개체계, 연탄호-긴등벌관개가 건설될 예정이며 이어 황해남도에 평양시 남부지구 관개건설계획도 상정되고 있어 향후 전국적으로 자연흐름식물길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힘(『조선신보』, 11. 28).

국제통신국, 국제 이메일 서비스 개시

11월 28일 『중앙통신』은 최근 북한 국제통신국에서 국제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고 보도. 통신은 “자체의 힘과 기술로 완성된 국제전자우편은 망(네트워크)보호체계와 큰 전송자리길띠(전송대역)를 가지고 있어 서신거래의 비밀을 담보하며 가입자들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자료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준다”고 전함. 또한 통신은 “사용자가 콤퓨터상에서 165번을 눌러 전자우편봉사를 요구하면 국제전자우편봉사체계에 접속하게 된다”면서 “사용자 이름과 암호를 주어 권한을 허가 받은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해야 전자우편통에 즉시 접속할 수 있다”고 전함. 한편 12월 1일 『경향신문』은 중국 관영 『신화통신』을 인용, 이메일 서비스는 평양 주재 외국인과 외국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북한 외교단 사업총국에 개설 신청을 한 뒤 가격이 300유로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고 보도. 이메일

수신은 무료인 반면 발신료는 25KB(약 1,000개 단어)에 3유로이며 이를 초과할 경우 15KB가 늘어날 때마다 1유로씩 추가로 지불해야 함(『중앙통신』, 11. 28; 『경향신문』, 12. 1).

2003년도 공업부문, 생산정상화 부진

12월 4일 통일부는 『주간북한동향(제671호)』을 통해 2003년 동안 북한이 공업부문에 대해 설비·보수 및 현대화를 통한 생산정상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성과가 저조하였다고 평가. 2003년에는 첫째, KEDO 중유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전력난과 외화부족으로 인한 원자재난 심화로 중공업부문의 정상화가 지지부진하였으며 공장가동률이 저조함에 따라 노후설비 보수·폐기 및 유휴인력 감축을 추진. 둘째, 북한은 경공업부문에 필요한 자재와 자금, 전력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각의 책임하에 취하고 그 실현을 위한 실무대책도 수립하는 등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경공업 지원 증대. 특히 김정일은 2003년도 총 10회의 경제분야 현지도 가운데 경공업부문 현지도를 4회 실시. 셋째, 공장·기업소의 자율적 운영 곤란 및 외부와의 협력 성과 부진. 특히 7·1조치를 통한 공장·기업소의 자율권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율적 운영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음. 감가상각금·초과이윤의 자체적인 재투자재원 활용, ‘물자교류시장’ 운영 등으로 기업 자율성이 증대되었으나 자금, 원자재, 전력 부족으로 그 효과는 크지 않았음. 다만 기업경영권이 당간부에서 지배인에게로 부분 이양되면서 일부 공장·기업소의 지배인 세대교체가 나타남. 한편 중국, 러시아 등 외부와의 협력을 모색하였으나 소수의 사례를 제외하고는 두드러진 성과는 없었음. 그러나 섬유·의류를 중심으로 한 가공무역제품 수출이 증가하여 외화 획득에 일조(통일부, 12. 4).

평양식당, 자율가격 등장

12월 5일 『조선신보』는 ‘특별료리’를 개발하고 ‘합의제’ 가격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창광거리의 만풍떡국집을 소개. 이 식당은 11월말부터 각종 불고기, 회, 탕, 국수, 주류 등 ‘특별료리’를 선보이고 영업시간도 저녁 8시에서 10시로 연장. 이 음식점의 리복실 주방장은 “나라에 손을 내밀지 않고 자체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이지요. 식당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이 있어야지요”라고 밝힘. ‘특별료리’의 원자재는 시장가격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소고기 200g에 500원(북한원), 국수 300원, 평양맥주 20원 등 평균보다 비싸지만 손님들이 이를 많이 찾는다고 리 주방장은 설명. 이에 반해 만풍떡국집의 기본메뉴에 대해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국정가격으로 원자재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떡국 한그릇 50원, 찰떡은 20원, 김치가 10원 등으로 '특별료리'보다 낮다고 지적. 신문은 또한 평양에 '합의제'라고 불리는 식당이 등장했다고 보도. 이곳은 "국정가격이 아니라 식당측과 손님들이 서로 '합의'한 음식가격으로 봉사를 하는 식당이다"라면서 만풍떡국집이 여기에 해당. 한편 신문은 "청광봉사관리국 일군은 이곳 식당들에서 기본은 인민들을 위한 봉사라고 강조하면서 '자체로 살아가기 위한 노력'도 결국 인민봉사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지적(『조선신보』, 12. 5).

휴대전화 가입, 2만대 돌파

12월 5일 『조선신보』는 휴대전화가 2002년 11월부터 평양시와 라선시에 보급되기 시작하여 2003년초 3,000대였던 휴대전화 수가 11월하순 현재 2만대를 돌파했다고 보도. 황철풍 체신성산하의 조선체신회사 사장에 의하면 9월부터 각 도소재지와 남포시·개성시, 량강도의 보천군·삼지연군·대흥단군 그리고 주요고속도로(평양-원산, 평양-개성, 평양-향산, 평양-남포, 원산-함흥) 등에서도 이동통신이 이용 가능(『조선신보』, 12. 5).

11월말 현재 인민생활공채 연장 판매

11월 29일 『민주조선』은 북한이 10년 만기인 '인민생활공채'를 11월말 현재에도 연장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 『민주조선』은 "인민생활공채구매사업이 마지막 단계에 이르러 더욱 활기있게 벌어지고있다"면서 "수많은 근로자들과 인민들이 애써 마련한 자금으로 인민생활공채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전함. 아울러 "마련된 자금들은 지금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에 효과있게 지출되어 큰은을 내고 있으며 그로 하여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사업에서는 많은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고 신문은 덧붙임. 한편 12월 18일 통일부의 『주간북한동향(제673호)』은 『중앙방송』이 16일 북한이 "공채판매사업 상무원들과 구매에 적극 참가한 각계각층 주민들에게 김정일 명의의 감사를 전달하였다"고 보도함으로써 판매사업이 종료되었음을 시사하였다고 보도(『민주조선』, 11. 29; 통일부, 12. 18).

『중앙방송』, 전력소비기준 준수 당부

12월 8일 『연합뉴스』는 『중앙방송』 8일 방송을 인용, 북한이 주민들에게 절전을

당부하고 정해진 전력소비기준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보도. 방송은 “모든 가정에서는 전기를 극력 절약해야한다”면서 “정해진 전력소비 기준을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규정해 놓은 전기제품만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 이 방송은 또 “평양시에서 한달 동안 가구당 한 등씩만 절약해도 서해 벌방(들이 넓고 논밭이 많은 곳)지대의 2개 도에서 한달간 쓸 수 있는 탈곡용 전력을 거저 얻는 셈”이라며 평양시 주민들에게 ‘한등 끄기’를 촉구. 이어 “전국적으로 모든 가정에 하루에 100W 전등 1개 대신 60W짜리 전등을 쓰면 여기서 얻어지는 전기는 1개의 큰 발전소에서 하루에 생산하는 전기량과 같다”고 설명한 뒤 “만일 1가구에서 1m³의 수돗물을 필요 없이 흘러보낼 때 0.7kWh의 전력을 버리는 것”이라며 발전에 이용되는 수자원을 절약할 것을 함께 당부(『연합뉴스』, 12. 8).

통일부, “북, 2003년도 에너지난 확보에 부심”

12월 11일 통일부의 『주간북한동향(제672호)』은 북한이 KEDO 중유공급 중단으로 심화된 전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석탄 증산, 발전시설 보수, 발전효율 제고 등을 위한 기술개발, 대중 에너지 수입 증가, 대체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확보대책에 부심했다고 보도. 통일부는 2003년도에 북한의 에너지 부문에서 화력발전 생산이 저조한 반면, 수력발전 및 석탄생산은 2002년에 비해 활발해졌으며 대중 에너지 도입량도 2002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평가. 또한 KEDO의 중유공급 중단으로 연간발전량의 10~15% 감소할 것으로 추정. 2003년도 에너지 부문의 특징은 ▲김정일의 빈번한 현지지도 및 중장기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전력 및 석탄 생산에 자금·수송·노동력을 집중 지원하는 등 전력 및 석탄 생산에 국가적 역량 총동원, ▲대규모 수력발전소 건설에 주력하면서 중소형발전소 건설을 병행하고 발전효율 제고를 위해 발전설비 보수·정비를 하며 대체에너지 개발·보급 및 절전운동을 전개하는 등 내부예비동원으로 에너지난 타개 추진, ▲러시아 극동지역의 잉여전력 활용을 위한 전력협력을 추진하고 스위스의 다국적기업인 ABB사와 송전부문 협력 등 외부와의 협력을 모색했으나 성과는 부진하였다고 통일부는 분석(통일부, 12, 11).

2003년도 에너지 생산 관련 주요 보도

시 기	내 용	비 고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제를 족치는 심정으로' 석탄 증산에 총력(1. 14, 『중방』) ○ 북창 등 주요 탄광에서 지난 10여일동안 전년대비 수천여톤의 석탄 증산(1. 17, 『중방』) ○ 내각 성·중앙기관에서 평남도 탄광 지원사업 전개(1. 23, 『로동신문』) ○ 부족한 전력으로 열차수송이 중단되고 이로 인해 화력발전용 석탄수송에 차질 발생(1. 30, 『중통』) 	KEDO 중유공급 중단 (2002. 12)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력발전관리국, 평양·동평양·청천강화력, 평남 주요 탄광 2월 계획 완수(2. 27, 『중방』)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덕천, 북창, 순천 등 주요 탄광 1/4분기 계획 초과 달성(3. 30, 『평방』)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지 중소형발전소들이 1/4분기 계획 조기 완수(4. 1, 『중방』) ○ 1/4분기에 석탄 40만톤 증산(4. 17, 『로동신문』) 	당중앙위 구호 발표 (4. 21)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탄공업총국 정권창건 55주년 기념일(9. 9)까지 3/4분기계획 완수 목표 설정(5. 22, 『중방』)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구호 발표후 40여일 동안 수력발전량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6. 8, 『중방』) 	장마 시작 (6. 20)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마철을 맞아 7월말 현재 수력발전량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8. 6, 『중방』) ○ 7월말 현재 230여개의 중소형탄광 개발(8. 10, 『평방』)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5만여톤 석탄 증산(8. 27, 『중방』)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월말 현재 수력발전량이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9. 6, 『중방』) 	정권창건 55주년 기념일(9. 9)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창화력, 온성탄광 등 겨울철 생산준비(10. 20, 『중방』)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원도, 평남도 올해 과업 완수를 위해 전력·석탄생산에 주력(11. 27·28, 『로동신문』)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해 양강도 7개를 비롯 수십개의 중소형발전소 건설로 수만kW 발전능력 조성(12. 3, 『중방』) ○ 전기석탄공업성 간부들 생산현장 지도사업 전개(12. 3, 『중방』) 	

주: 2003. 1. 1~12. 10 북한 보도 종합.
 자료: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672호)』.

개성공업지구 하위규정 채택

12월 17일 『중앙통신』은 1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개성공업지구의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제11호) ▲출입·체류·거주규정(제12호) ▲세관규정(제13호)을 채택했으며 해당 기관들에게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고 보도. 관리기관 설립·운영규정은 총 2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투자 및 경영활동과 관련한 사업을 직접 맡아하는 법인이며 설립은 개발업자가 담당 ▲이사장이 관리기관 구성원을 임명·해임 ▲투자조건 조성 및 투자유치, 기업창설 승인 및 등록, 건설허가 및 준공검사, 토지 이용권, 건물, 수송수단 등록, 기업 경영활동 지원 ▲운영자금은 수수료와 같은 수입으로 충당하며 부족한 운영자금은 기업(월 노임의 0.5%)으로부터 받아 충당 ▲예산은 자체로 편성·집행하며 연간 회계결산서는 다음 해 3월중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에 제출 등의 내용을 포함. 한편 출입·체류·거주규정은 총 30조로 구성, ▲적용대상은 남측 지역에서 출입하는 남측인원, 해외동포, 외국인과 그들의 수송수단 ▲공업지구 관리기관은 출입증명서(출입증, 관광증, 자동차통행증 등)를 발급하며 자동차는 지정통로로, 열차는 시간표에 따라 출입 ▲단기체류는 90일까지, 장기체류는 91일 이상, 거주는 1년 이상으로 구분하며 공업지구에도 도착 후 48시간 내 체류(거주)등록 ▲7일 이하 체류자, 남측 체류 국제지구 및 외국 대표기관 성원, 관광객 등은 체류등록 제외 ▲체류등록의 유효기간은 1년, 거주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 ▲공업지구 체류, 거주자는 인신과 주택의 불가침권, 서신의 비밀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함. 마지막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된 세관규정의 주요내용은 ▲남측 지역에서 공업지구로 출입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에게 적용 ▲사전지정된 품목 외의 물자의 반출입은 신고로 가능 ▲외화는 금액에 관계없이 반출입 가능(귀금속 및 보석은 신고) ▲자주왕래하는 운송수단은 세관에 등록, 별도의 수속없이 출입 가능 ▲세관검사의 간소화(도착지/출발지 검사 원칙, 표본검사 가능, 휴대품은 기계검사) ▲공업지구에서 관세의 기준가격은 해당 물자의 공업지구 도착가격으로 하며 관세의 계산은 해당 시기의 관세율에 적용 ▲공업지구 반출입 물자, 위탁가공물자는 관세 면제 등임(『중앙통신』, 12. 17).

북 재정성 부국장, 인민생활공채 설명

12월 19일 『조선신보』는 양창운 북한 재정성 부국장이 『월간조국(2004년 1월호)』과의 회견에서 인민생활공채 발행 및 그 수입금 사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보도. 양 부국장이 북한에서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게 된 의도와 관련,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렬강들은 경제봉쇄를 실시하는 한편 항시적인 반공화국침략전쟁소동을 벌려놓

음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 커다란 애로와 난관을 조성하였다”면서 “급격히 줄어든 전기의 부족으로 공장, 기업소들이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한 결과 인민경제의 련관고리들사이의 결합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반적범위에서 볼 때 국가예산 지출이 높아진데 상응하게 예산수입이 따라서지 못하였다”고 밝힘. 이러한 상황에서 “나라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필요한 자금수요를 외부의 지원이나 차관에 의거해서 해결한다는것은 실현불가능한 일이 아닐수 없었기 때문에 나라에서는 자기 인민의 힘에 의거하여 부족되는 자금수요를 충족할 목적으로부터 인민생활공채를 발행하였다”고 설명. 그는 아울러 인민생활공채수입금이 백암발전소, 금야강발전소, 어랑천발전소 등 발전소건설장들을 비롯한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영광거리, 승리거리가 등 현대적 개건보수하는 수도건설뿐 아니라 객차현대화 등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인민생활향상에 대대적으로 돌려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힘(『조선신보』, 12. 19).

김정일 위원장, 평안북도 발전소건설사업 현지지도

12월 19일 『중앙통신』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발전소건설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보도. 그러나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음. 김정일 위원장은 새로 건설된 “은홍청년발전소의 외부와 내부를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과 전력생산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발전소를 실리있게, 만년대계로 건설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고 통신은 전함. 아울러 그는 “군에서 방대한 발전소건설공사를 자체의 힘으로 해낸것은 대단한 성과이라고 하시면서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의 공로를 높이 평가하시였다”면서 “태천군에서는 풍부한 물원천을 리용하여 발전소들을 많이 건설함으로써 전력생산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고 밝힘. 한편 김정일 위원장은 태천 4호발전소건설장도 현지지도 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함(『중앙통신』, 12. 19).

항구 화물처리 능력 증대에 총력

12월 19일 『연합뉴스』는 『중앙방송』 16일 보도를 인용, 남포·청진항 등 북한의 주요 항구들이 연말을 맞아 화물처리 능력을 늘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 『중앙방송』은 “남포항의 일꾼과 노동자들이 화물수송에 역량을 집중, ‘총 돌격전’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히 “남포항에서 가장 큰 몫을 맡고 있는 부두4대노동자들이 기중기·벨트컨베이어를 비롯한 설비들을 총가동, 수송계획을 매일 105%초과달성하고 있다”고 보도. 또한 방송은 “전국 각지의 항들에서 올해 연말전투를 승리적

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벌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주요 항구의 원만한 화물수송노력을 집중적으로 소개. 청진항의 경우 경제건설장에 더 많은 화물을 보내기 위해 화물수송 규정과 질서를 확립, 하역작업 시간을 최대한 절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정계획을 120% 이상 수행하고 있으며 이밖에 홍남·원산·해주·송림항에서도 경제건설에서 수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 매일 수송계획을 완수하고 있음(『연합뉴스』, 12. 19).

『조선신보』, “7·1조치 생활력 검증”

12월 22일 『조선신보』는 북한이 ‘경제관리법의 개선조치(이하 7·1조치)’를 실시한 이래 ‘새로운 사고방식’이 경제 각 부문에 침투되고 있다고 보도. 신문은 북한이 7·1조치를 취함으로써 “‘실리사회주의’의 대담한 시도는 되돌릴수 없는 흐름으로 정착되었다”면서 “인민들도 나라의 재정부담으로 모든 생활이 보장된 과거를 이제는 먼 옛날의 일로 간주하고있다”고 설명. 한편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비롯한 대규모기업소를 포함하여 중요한 단위들에서 30대후반, 40대초반의 지배인들이 수완을 발휘하고는 등 경제분야에서 급속히 이루어지는 세대교체는 현장에서 새로운 활기를 불어 넣고 있다고 지적. 또한 3월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고난의 행군’ 시기의 시장운영이 자연 발생적인 측면이 있었다면 새로 나온 종합시장은 모든 면에서 ‘체계화’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함. “농민시장을 종합적인 소비품시장으로 확대하는 조치는 단순히 기존사실을 추인한 조치가 아니다”면서 “기존에는 주민 개개인만이 등록되어 시장에서 물품을 판매했으나 이제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가 시장활동에 참여하여 되어 현재 통일거리시장에 있는 판매대대의 약 5%는 공장, 기업소의 몫으로 할당되고 있다”고 밝힘. 아울러 시장에서 판매되는 소비품의 품종도 확대되어 “사실상 나라의 법과 사회적규범에 저촉되지 않는것은 모두 풀어놓았다고 말할수 있다”고 신문은 전함. 가격면에서는 행정의 조절, 통제기능이 더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쌀, 기름을 비롯한 중요지표상품의 한도가격을 설정하여 수요와 공급에 따라 10일에 한번씩 검토하여 ‘적절한 가격’을 산출하고 있다”고 신문은 밝힘. 통일거리시장을 비롯한 각지의 시장들은 종전에는 구역행정이 관할하는 ‘관리소’의 위치에 있었으나 새로운 경제 조치 이후에 국영기업소로 전환되어 시장은 상품을 파는 국영기업소, 협동단체, 개별적주민들로부터 ‘시장사용료’를 징수. 이것과 별도로 소득에 따른 국가납부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시장의 경제활동을 국가경제의 일부로 거둬들인것이다”고 신문은 설명. 한편 “국가계획에 따르면 공장, 기업소는 기본제품의 생산과정에 나오는 부산물로 인민생활필수품을 만들어 그중 30%를 국가

납부를 하지 않은 '생산유지비'로 쓸수 있다"면서 "국영기업소들이 시장에서 얻은 자금으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게 되면 국가류통망에 더 많은 상품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 국영상점의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격차도 점차 해소되어 나갈수 있다"고 신문은 설명(『조선신보』, 12. 22).

평양에 대형 상품광고 등장

12월 23일 『중앙통신』은 평양 대극장 앞의 대동강기슭 강안도로에 평화자동차회사의 '휘파람' 상품광고가 21일부터 등장하였다고 보도. 7·1조치이후 『평양신문』 등에는 국내 공장, 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상품에 대한 광고 비율이 대폭 늘어났지만 시내거리에 광고가 등장하기는 처음이라고 신문은 설명. 한편 이날 『세계일보』는 평화자동차측이 22일 "지난 11월부터 평양역과 동평양극장 등 평양 시내 4곳과 남포시 평화자동차종합공장 인근, 그리고 순항공항에서 평양 시내로 들어오는 도로변 등 2곳에 자동차 '휘파람'을 선전하는 대형 입간판 설치 작업을 벌였다"며 "이 중 '충성의 다리'를 제외한 5곳이 지난 21일 완공됐다"고 밝힘. 평화자동차측에 따르면 가로 9m, 세로 3.5m짜리 대형 광고판에는 북한 대중가요 '휘파람'을 부른 가수 전해영과 유도선수 계순희가 모델로 홍보. 아울러 평화자동차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근 평양 중앙방송을 통해 평화자동차 제품에 대한 10여분짜리 홍보성 프로그램이 제작돼 방영되고 북한행 항공기내 무역지 등에 기업 광고가 실리는 등 북한측의 적극적인 광고 유치 분위기가 있었다"라고 밝힘(『중앙통신』, 12. 23; 『세계일보』, 12. 23).

2. 농업 및 식량

니가타, 대북 쌀 50톤 지원

11월 20일 『조선신보』는 니가타(新潟)현에 소재한 'NGO인도지원연락회' 관계자들과 고바야시 요시아끼 니가타 시의회의원 등이 7~13일간 북한을 방문해 쌀 50톤을 전달하였다고 보도. 이들은 니가타현 주민들로부터 모은 쌀을 강원도의 봉춘식량공급소와 장덕식량공급소를 비롯하여 봉춘유치원, 덕성유치원, 문천유치원, 원산시주택아소등에 직접 전달한 뒤 천삼협동농장과 원산시인민위원회를 방문. 'NGO인도지원연락회' 가와무라 구니히코 대표는 "식량지원은 지금이 중요하다. 이번 방문은 지원미가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 일본여론을 바로 세우자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원활동을 계속하여 일·조(일·북) 우호관계 발전에

서 기여하겠다”면서 “랍치문제 등으로 막힌 량국관계가 하루빨리 정상화되면 좋겠다”고 덧붙임. 참고로 ‘NGO인도지원연합회’는 2000년 10월 발족되어 현재까지 20번에 걸쳐 약 1,100톤의 곡식, 비료 등을 지원해왔다고 신문은 전함(『조선신보』, 11. 20).

미, 2003년 대북지원 최대

11월 20일 『연합뉴스』는 유엔 인도지원사무국(OCHA)의 통계를 분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북한농업동향(제5권3호)』를 인용, 2003년 1월 1일부터 10월31일까지 미국의 대북 지원액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 총액 1억2,944만 달러의 24%인 3,111만 달러 규모로 공여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고 보도. 이어 유럽연합(EU)이 2,051만달러로 지원량이 두 번째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한국 1,683만달러 ▲러시아 1천만달러 ▲이탈리아 682만달러 ▲캐나다 469만달러 ▲스웨덴 450만달러 ▲독일 323만달러 ▲노르웨이 200만달러 ▲호주 176만달러 순임. 이들은 세계식량기구(WFP), 세계보건기구(WHO),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을 통해 주로 식량과 의약품을 지원하였고 어린이와 장애인 지도사업도 추진. 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미국은 일본이 대규모 식량을 북한에 보낸 2000년과 2001년을 제외하고는 지난 95년 이래 매년 북한에 가장 많은 규모의 지원을 해 왔다”면서 “WFP 등 국제기구를 통해 밀가루와 옥수수 등 현물을 북한에 지원하고 있고 당사자간 직접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힘. 한편 일본의 경우 2000년 9,566만달러, 2001년 1억489만달러로 2년 동안 최대 대북 지원국이었으나 북핵 및 납치자 문제로 인한 북일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2002년부터 대북지원을 중단해 왔음(『연합뉴스』, 11. 20).

중국서 곡물·가축 수입 급증

11월 25일 『연합뉴스』는 관영 『신화통신』 24일 기사를 인용, 2003년 북한과 중국 간 국경무역이 곡물, 가축, 전력 등을 중심으로 급증했다고 보도. 중국 단둥(丹東)시 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2003년 10월까지 단둥을 통과한 쌀, 밀, 옥수수 등 대북 곡물 수출은 6만6,255톤으로 2002년 동기대비 52.29% 증가했으며 특히 옥수수 수출은 205%나 급증한 1만3,673톤에 달함. 아울러 북한은 9일 단둥을 통해 지린(吉林)성의 한 농장에서 사육한 비육우 439마리를 수입. 한편 1~10월중 북한이 단둥을 통해 1,988만kWh의 전기를 중국에 송전함으로써 대중 전기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143% 증가했다고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11. 25).

OCHA, 대북 식량지원 호소

11월 18일 『Relief Web』는 유엔 인도지원조정국(OCHA)이 18일 발표한 ‘지원계획(Consolidated Appeals Process)’에서 유엔이 북한, 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기아에 허덕이는 21개 국가 4,500만명의 주민을 위해 2004년에 30억달러 규모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 자금 마련을 호소했다고 보도. 이 지원계획에서 북한의 경우 ▲농업 417만달러 ▲협력지원 사업 83만달러 ▲교육 92만달러 ▲식량 1억9,193만달러 ▲보건 1,865만달러 ▲수도 및 위생 472만달러 등 총 2억2,122만달러의 지원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힘. OCHA는 “많은 북한 주민이 건강상 문제를 안고 있고, 어린이의 9%는 영양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특히 양강도의 만성 영양부족 어린이 비율은 45%에 이른다”고 지적. 또한 “빈혈증세를 보이는 주민들이 다수이며 특히 임산부의 30%가 이 증세를 호소하고 1993년 이후 임산부사망률은 두배로 급증하였다”고 전함. 또한 “수자원은 풍부하나 많은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보급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 이는 2002년 10월 이후 한반도 긴장고조로 감소한 국제적 지원과 급성호흡기 증후군(SARS)으로 북한경제의 부담 가중에 기인한다고 보고서는 분석(그러나 북한에 보고된 SARS 환자는 없었음). 유엔의 지원계획이 이행되면 북한주민 약 700만명이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 28일 『중앙통신』은 북한 큰물피해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이번 협조호소발표는 우리 나라(북한)에 대한 국제공동체의 관심과 선의의 표시로 된다”면서 “우리는 인도주의협조를 그 어떤 정치적 목적에 리용하려 하는 것은 철저히 배격하지만 인도주의의 근본리념에 맞는 협조는 언제나 환영할 것이다”라고 밝힘. 그는 이어 “우리는 앞으로도 우리 나라에 인도주의 협조를 성의껏 제공해오고 있는 모든 유엔기구들과 정부적 및 비정부기구들 그리고 기증국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임(『Relief Web』, 11. 18; 『중앙통신』, 11. 28).

UNIDO, 북한 식량증산사업 지원

12월 9일 KOTRA는 『북한경제속보』에서 5일 공식 발표된 UNIDO(유엔공업개발기구)의 내부자료를 인용, UNIDO가 북한의 식량증산프로그램에 약 120만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3년에 걸쳐 세 개의 하부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를 돕는데 있음. 세 개 하부 프로그램은 식량증산을 위한 식품 가공공장 설립, 소형 수력 발전을 통한 생산 설비용 전기생산, 환경 친화적 식품 가공 인프라 지원임. 구체적인 하부 프로그램별 실행계획으로 첫째, 52만달러를 투자해 황주시에 최신형 염소젖 가공공장, 평촌, 락원에 식품생산 공장을 설립할 계

획. 둘째, 에너지 생산의 일환으로 소규모 수력발전설비를 제공, 운영하여 식품생산 공장에 발전을 제공할 목적으로 42만달러를 투입할 예정임. 셋째 환경 친화적인 식품생산 인프라 제공을 위해 244천달러를 투입하고 데모 프로그램, 교육훈련, 각종 정보 및 정책적 조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밝힘(KOTRA, 12. 9).

UN 관계자 "북 경제정책, 도시 빈민층 100만명 양산"

12월 9일 KOTRA의 『북한경제속보』는 『AP통신』 3일 보도를 인용, 하이더 유엔 대북원조 조정관이 2002년 7·1조치 이후 북한에 빈민층이 대거 양산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그는 북한기업들이 비용과 인력을 감축하여 상당수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떨어진 반면 물가는 상승해 식량과 생필품 구입이 어려워지고 있어 100만명에 이르는 도시 빈민층이 양산됐다고 밝힘. 하이더 조정관은 이들 계층의 출현으로 과거 기아와 질병이 만연했던 북한의 생활 여건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덧붙임(KOTRA, 12. 9).

제32차 FAO 총회 참가·연설

12월 11일 통일부의 『주간북한동향(제672호)』은 최택산 주이태리 대사가 로마에서 11월 29일~12월 10일 개최한 제32차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 총회에 참가하고 연설을 통해 FAO의 세계 식량안전을 이룩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했으며 국제기구와의 협조관계를 계속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보도. 그는 ▲북한이 적지적작·적기적작 원칙, 종자혁명, 감자농사혁명, 두벌농사, 토지정리사업, 물 관리, 농업의 과학화 등을 통해 농업생산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북한의 식량문제 해결 노력은 국제기구들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면서 ▲세계 식량안전을 위한 목표를 최단기간 내에 달성하기 위해 국내외적 환경을 조성하고 ▲식량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식량 및 농업기구를 비롯한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통일부, 12. 11).

연도별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액

(단위: 만달러)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10
지원액	35,988	18,177	35,725	25,768	15,384

자료: 통일부, 『주간북한동향(제672호)』.

FAO · WFP, 2004년 북한 구호사업 승인

12월 12일 『Relief Web』는 세계식량계획(WFP)이 이날 발표한 2003년 『응급구호 보고서(WFP Emergency Report, 제50호)』를 인용,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WFP가 2004년 북한 응급구호사업을 승인했다고 보도. FAO와 WFP는 ‘EMOP 10141.2’로 명명된 북한 응급구호사업에 1억7,100만달러를 투입해 650만명의 취약계층주민들에게 40만톤의 곡물을 포함해 모두 48만5천톤의 식량을 공급할 계획. 이 가운데 75%는 탁아소, 유치원, 초등학교, 고아원, 병원에 있는 어린이와 임산부 및 수유여성, 노인을 위해 사용됨. 이 사업은 또한 식량배급제에 의존하고 있는 도시가구들의 식량문제도 다룰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임(『Relief Web』, 12. 12).

3. 대외경제

UN, 묘향산보호기금 100만달러 지원

11월 24일 『세계일보』는 유엔과 국제 환경관련 단체가 북한 묘향산의 자연보호구 조성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100만달러를 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 영국의 존 윌리엄 다크워스 야생동물보호협회 기술고문은 북한의 해외홍보용 화보집 ‘조선(11월호)’를 통해 세계환경기금(GEF) 75만달러, 야생동물보호협회 15만달러, 유엔개발계획(UNDP) 10만달러 등 모두 100만달러를 묘향산 자연보호구 조성 사업에 지원했다고 밝힘. 그는 또한 이들 기구 및 단체들은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었던 2000년 중순부터 자연보호구 조성사업을 지원했으며 현재 이 사업은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덧붙임(『세계일보』, 11. 24).

북·베트남간 규격화·계량·품질관리 협조협정 조인

11월 24일 『중앙통신』은 북한 국가품질감독국과 베트남의 규격 및 품질총국이 규격화·계량·품질관리 분야 협조에 관한 협정이 20일 하노이에서 조인되었다고 보도. 북측에서 김형철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품질감독국 대표단원들과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 및 베트남의 규격 및 품질총국 총국장과 과학기술성 부상이 참석한 가운데 조인식이 진행되었음(『중앙통신』, 11. 24).

EU, 북한에 450만유로 지원

11월 25일 『Relief Web』는 유럽 집행위원회 산하 인도지원국(ECHO)이 북한의 먹는 물 및 공중위생 개선을 위해 450만유로를 지원하기로 24일 결정했다고 보도. 북한, 그루지야, 파키스탄, 동티모르, 중국 등에 모두 1,150만유로를 투입하는 인도주의 지원사업 5건을 채택하면서 이 중 약 450만유로를 대북지원 자금으로 할당. ECHO는 “북한의 전반적인 보건 및 공중위생 시스템이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시설 노후로 인해 수인성 질환 발병의 위험이 높다”면서 “이는 유아사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Relief Web』, 11. 25).

북·중 슬레이트 공장 공동 생산

11월 25일 『중앙통신』은 최근 북한 무역성 건재무역회사와 중국 길림성 방직수출입공사 및 장춘영초과학주식유한공사가 공동 노력과 투자로 슬레이트를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보도. 통신은 이 제품이 “다양한 색깔로 건설물의 품위를 한층 더 높여 줄뿐 아니라 도시미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면서 아울러 “물리화학적 변화에 대한 견딜성과 굳기가 강하고 수명이 길다”고 설명. 또한 “석면 스테트(슬레이트)의 한쪽 면에 물을 담아 놓고 30여일이 지나도 뒤면에 습기가 전혀 생기지 않았으며 1m 높이에서 0.5kg인 쇠공을 떨어뜨려도 깨어지지 않았다”면서 “령하 25도씨부터 25도씨까지의 온도에서 30회정도 얼었다 녹아도 아무런 물리적 변화가 없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중앙통신』, 11. 25).

러 전력회사, 북과 전력수출 논의

11월 27일 『연합뉴스』는 『러시아의 소리방송』을 인용, 이날 러시아의 국영 전기 회사 ‘통합에너지시스템(UES)’이 대북 전력수출 문제를 북한과 협의하였다고 보도. UES의 아나톨리 추바이스 사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선(북한)에 전력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량을 확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현재 조선과 이 문제를 토의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전함(『연합뉴스』, 11. 27).

TSR·TKR 연결, 북한 현장조사 실시

12월 1일 『연합뉴스』는 러시아 극동 철도당국의 말을 인용, 러시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TSR)와 한반도 종단철도(TKR)를 잇기 위한 준비 작업의 하나로 북한 철도

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다고 보도. 겐나디 베데르니코프 러시아 극동 철도국 대변인은 “러시아 철도 전문가들이 두만강 남쪽의 북한측 철도 56km 구간에서 1개월간 3차 현장조사를 실시했다”며 “한차례 정도의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힘. 앞서 러시아 철도부의 겐나디 파데예프 장관은 11월 27일 노후화된 북한 철도복원에 필요한 설계 작업 등을 위해 약 5억루블의 예산을 배정, 측량작업 등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음(『연합뉴스』, 12. 1).

북한선박, 일본 입항 대폭 감소

12월 9일 KOTRA는 『북한경제속보』에서 이날 『일본경제신문』을 인용, 일본 재무성이 화물선 만경봉호를 비롯해 2003년 한해 동안 일본 전 항구에 입항한 북한 선박수가 10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대비 약 30% 감소했다고 보도. 북한 선박에 대해 입항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해상보안청 간부는 “단속, 검사가 강화되면서 은밀히 밀수를 하던 선박이 입항하지 않거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 화주가 용선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재무성 자료에 의하면 북한 선박의 연간 입항 수는 1998년에 1,007척이었으며 매년 4%에서 17%가 증가하여 2002년에는 1,415척에 이르렀다. 그러나 2003년 10월말까지 832척이 입항해 작년 동기 1,155척 대비해 28% 감소. 과거 5년간 입항수가 많았던 시기는 일본과 북한의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던 2002년 9월로 150척이 입항한 바 있음. 일반적으로 가을에서 연말에 걸쳐 입항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재무성은 덧붙임(KOTRA, 『북한경제속보』, 12. 9).

중, 대북 국경무역 급증

12월 9일 『연합뉴스』는 8일 중국 단둥 세관 자료를 인용, 2003년 중국과의 국경 무역에 참여한 북한 선박의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보도. 10월까지 중국과의 국경 무역에 가담한 북한 선박은 총 56척으로 2002년 같은 기간의 18.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국경 무역은 북한 신의주와 중국 랴오닝성·단둥 사이를 흐르는 압록강의 선상에서 이뤄지는데 과거에는 주로 중국측의 선박이 주류를 이뤘으나 2003년에는 500톤급 이하의 북한 선박이 대거 무역에 가담, 10개월간 국경 교역량이 4만5,138톤에 달함(『연합뉴스』, 12. 9).

북, UNIDO총회서 '에너지지원' 강조

12월 11일 『중앙통신』은 북한이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진행된 제10차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총회에 참석했다고 보도. 북측 단장은 “현시기 기구의 기능과 역

할을 보다 강화하여 개발용자에 관한 국제대회와 지속개발에 관한 세계수뇌자회의에서 제시된 무역촉진과 농촌에너르기발기들을 실현하는것은 기구앞에 부과된 가장 선차적인 과제의 하나"라고 지적. 그는 "오늘 에너지기문제는 발전도상나라들의 농업생산과 환경문제 해결에서 급선무로 나서고 있다"며 이것은 "에너기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우선권대상으로 중소형발전소와 재생에너기대상을 시범적으로 완성하고 이를 일반화하도록 해야할 절박성을 부각시켜 주고 있다"고 밝힘(『중앙통신』, 12. 11).

북, IT분야서 국제협력 강조

12월 14일 『연합뉴스』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보사회정상회의(W SIS)에 참가한 김영대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부위원장이 11일 정보통신(IT)분야에서 국제적 협조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 김 부위원장은 정상회의 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유엔 등 국제기구들은 인재양성, 기술이전 등 정보산업 분야에서 국제적 협조와 교류를 적극화하기 위한 협조대상 계획들을 확대해 나가야할 것"이라고 주장. 그는 이어 IT기술을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합법적인 정부들을 전복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에 악용하는 행위들은 철저히 배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연합뉴스』, 12. 14).

중 다칭-북 안주 송유관 확인

12월 14일 『요미우리신문』은 북중관계 소식통을 인용, 중국 최대의 헤이룽장(黑龍江)성 다칭(大慶) 유전에서 북한 안주 부근까지를 연결하는 송유관 존재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 1976년에 개통된 이 송유관은 직경 40cm 정도로 연간 최대 400만톤의 원유 수송이 가능. 다칭 유전과 라오닝성(遼寧省) 다렌(大連)을 연결하는 송유관은 라오닝성 북부지방 철령(鐵嶺)에서 갈라져 약 400km에 걸쳐 단둥(丹東) 북부, 압록강, 신의주를 지나 안주 부근까지 이어짐. 이 송유관은 보안과 도난방지를 위해 땅속에 매설되어 있으며 압록강은 강바닥을 통과해 매설. 한편 중국 무순(撫順)과 단둥(丹東) 등 2군데, 종착지인 북한 영내 1곳 등 3곳에 원유, 중유, 가솔린 정유소가 설치되어 있음. 이 송유관을 통해 북한으로 전달된 석유량이 확실하지 않으나 1990년대 전반은 연간 80만~110만톤이었다가 1990년대 중반부터 KEDO를 통해 매년 중유 50만톤이 공급되어 1999년에는 31만7천톤까지 줄었다고 신문은 전함. 석유 수송량은 2000년부터 다소 회복되었지만 북핵문제가 재발된 2002년에는 2001년보다 10톤 줄어든 47만2천톤에 그쳤다고 지적. 현재 KEDO의 공급은 2002년말부터 중단되었

기 때문에 북한은 중국의 석유 공급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고 신문은 분석(『요미우리신문』, 12. 14).

북한-러시아, 송전선 건설 문제 논의

12월 15일 『연합뉴스』는 이날 『이타르타스통신』의 기사를 인용, 러시아 에너지 기업 ‘보스토케네르고(Vostokenergo)’ 대표단이 최근 북한 전기석탄공업성 초청으로 평양을 방문, 북한 에너지 전문가들과 블라디보스토크와 북한 청진을 잇는 송전선 건설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알렉산드르 오그네프 보스토케네르고 수석 엔지니어는 이날 이와 관련, 양국 당사자들이 송전선 건설에 따른 비용 문제부터 북한 기술자 훈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연합뉴스』, 12. 15).

남·북·러, 공동전력망 구축 협의

12월 17일 『동아일보』는 러시아 극동 전력회사 ‘보스토크에네르고’의 16일 성명을 인용, 남북한과 러시아 등 3국이 공동전력망 구축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보도. 보스토크에네르고는 성명에서 “3국은 최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기전문가 회담에서 단일 전력망 구축을 위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힘. 아울러 성명은 “평양회담에서는 단일 전력망 구축을 위한 비용과 조직 등 제반 문제들이 논의됐다”면서 “3국은 내년 중에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 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했다”고 전함(『동아일보』, 12. 17).

중 투먼-북 온성 관광선로 개통

12월 22일 『연합뉴스』는 이날 『흑룡강신문』을 인용, 북·중 국경도시인 중국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와 북한의 함경북도 온성군을 연결하는 관광선로 개통을 위한 조인식이 최근 투먼시에서 진행되었다고 보도. 이 신문에 따르면 계약서 규정에 따라 두 도시를 잇는 관광선로는 조인식 당일 개통됐으며 관광의 형태는 1일 관광과 1박 2일, 2박 3일관광 등 세 가지로 실시됨. 관광 대상은 왕재산대기념비동상과 대목구형명사적지, 두로봉혁명사적지, 남양혁명사적지 및 예술표연관람 등임. 투먼시-온성군간 관광선로는 투먼시의 관광진흥책에 따라 개통된 것이며 향후 두나라 국경 도시 사이의 우호관계를 증진할 것이라고 『흑룡강신문』은 덧붙임(『연합뉴스』, 12. 22).

4.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현대아산, 개성공단 초대이사장에 김고중 현대아산 특보 내정

11월 24일 『문화일보』는 현대아산의 발표를 인용, 개성공단의 관리·운영 책임자인 개성공업지구관리기관 초대 이사장에 김고중 현대아산 비상근 특별보좌역이 내정 되었다고 보도. 한편 이와 관련, 29일 『대한매일』은 정세현 통일부 장관이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의 구성 문제는 공동사업자인 토지개발공사와 현대아산이 충분히 협의하고 합의한 뒤 북한에 추천해야 하며, 입주 기업들의 의견도 반영돼야 한다”면서 “양쪽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아울러 “이달 초 열린 제7차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에서도 시간을 갖고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보도(『문화일보』, 11. 24; 『대한매일』, 11. 29).

남한, 북측에 폭약자재 전달

11월 26일 통일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남한의 암반 제거·폭발용 폭약자재가 남북 철도·도로 연결 작업을 위해 이날 북한에 1차 전달되었다고 발표. 통일부에 따르면 폭약은 주당 경의선·동해선 각 1회씩 16톤 내외를 북측의 준비사항을 확인한 후 제공되며, 제공되는 자재의 투명한 사용을 위해 남측 기술인원 1~2명이 북측 공사현장을 방문(3박4일간)하여 기술지도 및 사용참관을 실시할 것임. 제공된 자재는 경의선의 경우 판문역 부지조성 및 궤도자갈 생산, 동해선의 경우 구선봉 고개(철도노반), 감호역 부지조성, 궤도자갈 생산 등에 사용. 한편 이날 『한겨레신문』은 통일부 관계자가 “민감한 품목이니 만큼, 앞으로도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사용 현장 실사를 계속해 군사적 전용 여부를 확인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통일부, 11. 26; 『한겨레신문』, 11. 26).

우리은행, 북한과 코레스 계약 주춤

11월 27일 『연합신문』은 우리은행이 북한 진출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면서 코레스 계약 체결을 시도하고 있으나 북한과의 입장 차이와 국내 금융시장 환경 변화로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북한과의 은행 거래에 필요한 기본계약인 코레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최근 베이징 등에서 접촉을 가졌으나 여신 한도 공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북한측은 북한의 금을 수입하는 남한 기업들

이 선지급 형태로 500만~1천만달러 가량을 지급하고 이를 우리은행에서 보증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국내의 금융 상황이 어려운 데다 보증 절차 등이 까다로워 우리은행이 이런 복측 제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안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북한과의 협상은 정치적인 상황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계약건 자체가 무산됐다고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함. 참고로 우리은행은 최근 철도청과의 주거래은행 계약 체결 등을 통해 남북한 철도 건설사업 등 대북한 사업 진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음(『연합뉴스』, 11. 27).

통일부, 현대 개성공단 '중기관리사무소' 설치 승인

통일부는 1일 개성공단 1단계 건설사업의 시공 준비를 위해 현대아산이 신청한 '개성공단 중기(건설기계)관리사무소' 설치를 승인했다고 밝힘. '현대중기관리사무소'는 1단계 100만평 외부 인접지역인 북한 개성시 삼봉리에 설치되며, 사무실·숙소 부지 1,000평과 정비공장 부지 2,000평으로 이루어짐. 또한 이 사무소는 개설이후 10년간 유지되며, 현대아산에서 파견하는 인력 5명과 현지고용 인원 22명 등 총 27명이 주재하고, 사무소 설치비는 42만달러, 월 유지비는 8만달러로 예상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덧붙였다(통일부, 12. 1).

인천항 대북교역량 크게 증가

12월 3일 한국무역협회는 인천항의 대북교역량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발표. 2003년 10월까지 인천항을 통한 대북교역량은 2억7,700만달러 상당으로 2002년 같은 기간 보다 37.5% 늘었고 이 중 반출은 1억3,800만달러, 반입은 1억3,900만달러로 각각 46.6%, 28.3%씩 증가. 이 증가율은 반출의 경우 전국항구 평균의 약 3배, 반입은 전국항구와 비슷한 수준임. 인천항구의 대북반출비중은 2002년 37%에서 2003년(1~10월) 45%로 확대, 대북반입비중은 2002년 72%에서 2003년(1~10월) 64%로 하락. 반출 품목으로는 의류가 2,871만9천달러로 가장 많고 섬유직물 1,747만9천달러, 농약·의약품 1,078만7천달러, 면직물 825만6천달러, 영상기기 398만2천달러, 축산가공품 364만3천달러, 자동차 217만3천달러 순임. 반입 역시 의류가 7,700만6천달러로 가장 많았으며 아연제품 2,364만8천달러, 연체동물 938만3천달러, 수산가공품 347만5천달러, 기호식품 268만3천달러, 갑각류 148만1천달러, 축산부산물 121만4천달러 등으로 집계(한국무역협회, 12. 3).

인천항의 대북무역 추이

(단위: 백만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1~10)
반출	54(-8.2)	68(26.6)	122(78.8)	125(2.2)	138(10.6)	138(46.6)
반입	75(-23.3)	91(22.2)	112(22.5)	102(-8.9)	187(83.1)	139(28.3)

주: ()내는 전년동기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요 항구별 대북교역 동향

(단위: 백만달러, %)

	2002		2003(1~10)	
	반출	반입	반출	반입
전체	369(65.1)	261(53.7)	305(17.0)	217(28.3)
인천항	138(10.6)	187(83.1)	137(46.6)	139(28.3)
부산항	4(-29.7)	66(25.7)	4(41.6)	64(18.2)
울산항	90(80.9)	-	63(-19.1)	8(100.0)
속초항	17(201.7)	2(-46.0)	15(36.4)	1(-21.2)
여수항	44(44.1)	-	22(-46.3)	-
군산항	32(2,491)	0.3(-81.4)	25(73.3)	0.6(309.1)

주: ()내는 전년동기비 증가율.
자료: 한국무역협회.

2003년 남북협력기금 대출 증대

12월 5일 『동아일보』는 4일 수출입은행의 자료를 인용, 2003년 수출입은행의 남북협력기금 유·무상 대출 규모가 남북경협 활성화에 기인하여 2002년보다 크게 늘어났다고 보도. 남북교역 기업에 대한 유상 대출 건수는 2002년 5건에서 2003년 11월까지 22건으로, 그 규모도 3억9,000만원에서 66억원으로 크게 증가. 인도적 지원단체 등에 대한 무상지원 액수는 2002년 1,851억원이었으나 2003년 11월까지 1,659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경협과 인도적 지원 등을 포함한 남북 교역액수는 2001년 4억295만7,000달러, 2002년 6억4,173만달러, 2003년 8월말 현재 4억675만8,000달러를 기록(『동아일보』, 12. 5).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 개최

12월 9일 통일부는 제8차 남북철도·도로연결 실무접촉이 12월 2~5일간 속초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 남북 양측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 동해선 교량상판 제공, 자재·장비 기술지원 일정 등에 협의하고 6개항의 합의를 채택(통일부, 12. 9).

< 공동합의문 >

1. 남과 북은 철도 신호·통신·전력계통 설계에 대해 부록 1(신호·통신·전력계통 합의사항)을 반영하여 확정하고, 신호·통신·전력계통 공사를 2004년 2/4분기부터 착수하기로 한다.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공사 자재·장비 제공에 관한 합의서 첨부 1(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에 포함하여 공사일정대로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쌍방은 신호·통신·전력계통 자재·장비의 설치·운동을 위해 필요한 협력을 하며, 구체적 사항은 문서교환방식으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2. 남측은 동해선 북강·남강 교량을 합성보로 2004년 1월중으로 설계하여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하고 북측은 이에 앞서 현장기술협회가 이루어지도록 협력한다.

3. 남과 북은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공사를 위한 전체분 자재·장비 품목 및 수량을 부록 2와 같이 조정하며, 레일, 침목 등 궤도부설에 필요한 자재·장비를 공사 일정에 맞추어 빠른 시일내에 제공하도록 한다.

4. 남과 북은 제공된 자재·장비의 수리·정비를 위한 제7차 기술지원을 경의선은 2004년 1월 27일부터 2월 5일까지, 동해선은 1월 8일부터 17일까지 실시하기로 하며 앞으로 진행할 기술지원 날짜는 실무접촉 또는 문서교환방식을 통해 정하기로 한다.

북측은 남측 기술지원 인원들의 신변안전과 편의를 보장하며, 기술지원을 위한 방법과 절차 등은 제5차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접촉 합의서 부록2(남북철도·도로연결 자재·장비 기술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준한다.

5. 남과 북은 차량운행사무소를 200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설치·운영하기로 하며, 남북사이의 열차운행에 관한 기본합의서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여 차기 실무협의회에서 채택하기로 한다.

6. 남북철도·도로연결실무협의회 제4차 회의(실무접촉 포함)는 문서교환방식 또는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정한다.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

12월 9일 통일부는 한국토지공사에 대해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설치를 승인했다고 발표. 아울러 11일 『연합뉴스』는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 착공식이 이날 북한 개성직할시 봉동리 개성공단 개발사무소 예정부지에서 남북측 관계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고 전함. 김진호 한국토지공사 사장은 기념사에서 “개성공단 사업은 남북경협에 있어 하나의 모형을 제시하는 중요한 사업으로 남북 상호간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모두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이라면서 “모든 일에 있어 그 시작이 중요하며 한번 시작된 일은 탄력을 받아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게 돼 있다”고 밝힘. 이에 따라 사무소·숙소 부지 3,500평과 건평 500평 규모의 ‘한국토지공사 개성공업지구 개발사무소’는 북한 개성시 봉동리 1단계 지역내에 위치하게 되며 토공 자체 자금 약 50억원으로 건설될 계획. 2004년 5월 완공되면 남북경협 협의사무소 등 다목적으로 활용될 전망(통일부, 12. 9; 『연합뉴스』, 12. 11).

2003년 대북식량차관 전달 완료

12월 15일 통일부는 이날 동해항에서 4,800톤의 쌀을 실은 55항차 수송선박(수광호)이 원산항을 향해 출항함으로써 2003년도 대북식량차관 40만톤 전달이 완료되었다고 보도. 7월 3일 첫 항차가 출항한 이래 쌀 40만톤이 55차례에 걸쳐 남포 20만 8200톤, 원산 5만1800톤, 홍남 5만톤, 청진 4만5천톤, 송림 3만톤, 해주 1만5천톤 등 총 6개 항구로 수송되었음. 남측은 남북간 합의에 따라 매 10만톤 전달에 따른 분배현장확인을 회당 5~6명의 인원이 총 4차에 걸쳐 12회 실시하였음(남포 3, 원산 3, 청진·홍남 2, 해주 1, 평양 1). 분배현장확인 결과,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kg당 46원, 1인당 하루에 380g, 월 2회 공급되고 있었음. 북 주민들은 남측 동포에게 감사를 표시했다고 덧붙임(통일부, 12. 15).

통일부, 1~11월중 남북교역 동향 발표

12월 15일 통일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03년 1~11월 남북교역액이 670,844천달러(반입 264,425천달러, 반출 406,420천달러)로 전년동기 567,670천달러 대비 18.2% 증가했다고 발표. 남북교역 참여업체는 451개(위탁가공업체 110개)이고 품목수는 572개(위탁가공교역 품목 233개)로서 주요 반입품은 농림수산물, 섬유류 등이며 반출품목은 농림수산물, 섬유류, 화학공업제품, 잡제품 등임. 1~11월중 남북교역이 전년동기 대비 증가한 것은 상업적거래·위탁가공교역 등 거래성교역이 꾸준

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비료지원 등 순수 인도지원물자 125,931천달러, 식량차관 제공 97,292천달러, 남북철도·도로 연결공사 자재·장비 차관 제공 29,069천달러 제공 등 비거래성 교역의 증가에도 기인한다고 통일부는 분석(통일부, 12. 15).

2003년 1~11월중 남북교역 동향

(단위: 천달러)

거래성 교역	377,326 (+20.6%)	상업적 매매거래	205,087 (+32.5%)	반입	159,241
				반출	45,845
		위탁가공 교역	172,239 (+9.0%)	반입	105,050
				반출	67,189
비거래성 교역	293,519 (+15.2%)	협력사업용 교역	41,227 (-47.7%)	반입	-
				반출	-
		대북지원	252,292 (+45.1%)	반입	.
				반출	252,292

1. ()는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2. 협력사업용 교역은 경수로사업 물자 23,645천달러, 금강산관광사업 물자 13,187천달러, 기타 협력사업 물자 4,395천달러.

제4차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 개최

12월 23일 통일부는 제4차 경협제도실무협의회, 제1차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1차 청산결제실무협회가 17~20일 평양에서 개최되었다고 발표. <제4차 남북경협제도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개성·금강산지구 통행합의서 채택문제와 남북간 직접 통신연결문제, 경제관련 법령 상호교환 문제, 산업재산권 문제 등을 협의. 또한 ▲개성공단 및 금강산특구의 원활한 개발을 위해 통행합의서 체결이 긴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쌍방이 인식을 같이하고, 빠른 시일내에 실무접촉을 개최하여 쟁점사항을 협의·타결하기로 함. 한편 통행합의서의 핵심문제인 신변안전과 출입절차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으나, 완전한 합의를 이루지는 못함. 아울러 남북 당국 및 민간 사이의 경제협력과 직교역을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통신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남북경협협회사무소, 원산지 확인 및 청산결제 등과 관련된 당국간 통신과 개성공단개발사무소, 금강산관광지구 및 북측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임가공사업 등을 위한 민간통신에 대하여 남북간 직접 통신연결 원칙에 합의하고 ▲서울-개성-평양간 통신연결을 위한 연결 방법과 절차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무접촉을 통해 계속 협의할 예정. 이밖에도 남북간에 이미 합의된 바 있는 ▲경제관련 법령의 상호교환과 산업재산권 문제 등에 대해서도 향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 한편 <제1차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에서 남북은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산지확인 시범실시 시기와 발급내역의 정기적 통보 등에 합의. 통관절차와 공정교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여 원산지확인 제도의 실효성 보장에 노력하기로 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재내용 상세화에 대하여도 계속 협의할 계획. 마지막으로, <제1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회>는 남북간 청산결제 방식의 교역을 시행하기 위해 ▲청산결제 한도, 대상품목, 신용한도, 이자율 등에 대해 협의. 청산결제의 한도와 결제은행간 통신수단 등에 대해서는 쌍방의 입장이 접근되었으나 대상품목 등에 대한 견해차는 해소하지 못하고 계속 협의하기로 합의. 아울러 ▲제2차 회의는 청산결제은행간 접촉과 동시에 진행기로 결정(통일부, 12. 23).

< 제1차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공동보도문 >

1. 남과 북은 『남북사이에 거래되는 물품의 원산지 확인절차에 관한 합의서』 제8조 『원산지확인에 관한 세부기준』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쌍방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주 또는 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상호 통보하기로 하였다.

통보내용에는 발급번호, 날짜, 송하인, 수하인, 상품명, 수량, 운송수단 등을 포함한다.

3. 남과 북은 남북간 통관절차 및 공정교역 등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하기로 하고, 교환할 자료목록을 문서교환방식 등을 통해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4. 남북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의 장소와 날짜는 추후 문서교환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 제1차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공동보도문 >

1. 남과 북은 청산결제를 2004년 2/4분기부터 시행하기로 하며, 청산결제 기간은 시행 첫해에는 시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하기로 하고, 차기연도부터는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남과 북은 청산결제한도를 시행 첫해인 2004년에는 미화 1천만~3천만 달러 범위내로 한다.
3. 남과 북은 청산결제 은행간 지급지시를 위한 통신수단으로 세계은행간 금융통신망(SWIFT)을 이용하며, 이 밖에 은행업무수행을 위해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하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청산결제 시행을 위한 실무문제들을 문서교환방식으로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남북청산결제실무협의 제2차 회의의 날짜와 장소를 문서교환 방식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5. 남북대화 및 대북정책

남북출입관리사무소 12월 중순 가동

11월 24일 『연합뉴스』는 남북출입관리소가 12월 중순에 본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보도. 초대 남북출입관리사무소장으로 임명된 김종태 소장은 12월 중순경부터 경의선 남측 최북단인 도라산 역사에 개설·본격적으로 가동되는 남북출입국사무소를 관장하며 동해선 운영도 겸하게 됨. 남북출입관리사무소는 통일부 출신의 3급 관리(부이사관)를 소장으로 하고 경의선 운영과(16명), 동해선 운영과(8명) 등 2개 과로 나뉘어 상시적으로 운영되며 이와는 별도로 필요할 경우 법무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관세청, 국가정보원, 국군기무사령부 등의 인력을 지원받아 CIQ(통관·검색·검역) 업무를 맡음. 남북출입사무소는 주로 인적·물적 교류 승인업무와 대북 협의·연락업무를 하게 되며 특히 남북출입사무소장은 ‘남북 철도·도로운영공동위원회’의 남측 수석대표도 겸직하게 된다고 통신은 설명(『연합뉴스』, 11. 24).

면회소 설계·착공비용 협력기금 지원 의결

12월 16일 『연합뉴스』는 정부가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 설계 및 착공 경비 20억1,9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 지원키로 의결했다고 보도.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북한 정촌 인상후 연광산 개발사업에 대해 대출기간 18년, 대출이자율 연 2%의 조건으로 남북협력기금에서 60억3,400만원을 대출키로 승인. 또 ‘남북한 교역대상 물품 및 반출·반입 승인 절차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내농림수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반입승인 품목을 조정해 녹용전지, 냉동밤, 냉동대추, 냉동잣, 냉동호두 등 9개 품목을 승인이 필요한 품목으로 추가 지정하고 산미꾸라지를 승인 요구품목에서 제외. 이와 함께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8월 30일동안 꽃게의 산란기간 중 반입과 붉은 대게와 대게의 암컷 및 어린 게의 반입을 제한키로 결정. 정부 당국자는 “면회소 건설사업에 대한 협력기금 지원으로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제도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면서 “대한광업진흥공사에 대한 대출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인상후연의 안정적 확보와 남북 자원협력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남북간 경제협력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연합뉴스』, 12. 16).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북한 국내법 적용

12월 19일 『조선일보』는 북한이 경수로 공사 중단에 반발해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 경수로 부지에 북한 사람들을 무단 출입시키고, 한국 근로자들에 대해 북한 국내법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왔다고 보도. 정부 당국자는 “지난 10~11일 함남 신포시 금호지구에서 열렸던 KEDO와 북한간의 고위 전문가회의에서 북측이 경수로 부지에 대한 북한 인력의 출입 및 북한 국내법 적용 방침을 통보해왔다”면서 “북측이 실제로 이같은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경우 대응 수단이 마땅치 않다”고 우려. 양측은 2004년 1월로 예정된 다음 고위 전문가회의에서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할 계획. 12월 중순 현재 경수로 부지에는 KEDO 소속으로 남한 인력 303명과 크레인과 트럭 등 대부분의 장비·시설이 남아 있다고 신문은 덧붙임(『조선일보』, 12. 19).

6. 북한·주변국가 관계

KEDO 대북 경수로 사업 중단 공식발표

11월 21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는 이날 공식발표에서 한국·미국·일본 및 유럽연합(EU)으로 구성된 KEDO 집행이사회가 북한으로 인해 경수로사업을 계속하기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경수로사업을 2003년 12월 1일부터 1년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 KEDO는 성명을 통해 ▲집행이사회는 중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경수로 사업의 장래를 평가·결정을 내릴 것이며 ▲중단기간 중에도 부지내 및 부지외의 보존·관리조치를 수반할 것이며 KEDO는 그 이행을 위해 북한과 협의할 방침이며 ▲사업중단(suspension)은 KEDO와 북한이 양자간 합의서 및 부속의정서에 규정된 관련조항들을 계속 준수해야할 것임을 시사한다는 내용을 발표. 이에 대해 22일 『연합뉴스』는 트리코 대변인이 “경수로 공사현장에 체류하고 있는 인력 450명 가운데 100여명은 공사중단 이후에도 남아 현장 유지와 보전 업무를 맡게 된다”고 덧붙였다 KEDO 관계자는 “현재 경수로 공사 현장에는 초대형 크레인을 비롯해 5억달러 가까운 장비와 자재들이 반출 대기중”이라면서 “기술적으로 볼 때 경수로 건설공사가 중단된지 3년 이상 경과하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공사중단이 장기화하면 최악의 경우 14억달러 가까이 투입된 지금까지의 공정이 쓸모없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고 보도(KEDO, 11. 21; 『연합뉴스』, 11. 22).

미 상·하의원, 북 관련 법안 상정

11월 22일 『세계일보』는 북한의 민주화 및 인권 정책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2003 북한 자유 법안’이 미 상원의 샘 브라운백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캔자스)과 에반 베이(민주·인디애나) 의원에 의해 20일 미국 상원에 상정됐다고 보도. 이 법안은 미국정책이 한반도내의 대량과괴무기 개발 종식, 민주체제하의 통일 지원, 북한 인권 보호 등을 목표로 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해 오는 2006 회계연도까지 북한 민주화와 인권 지원 등에 모두 5억6,200만달러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고 있음. 또한 이 법안은 2003회계연도부터 2006회계연도까지 ▲인도적 식량지원에 매년 1억달러 ▲탈북자와 북한 고아 보호에 매년 2,550만달러 ▲한국·미국·일본내 비정부기구의 북한 인권관련 대화 노력에 매년 200만달러 ▲북한 라디오 공급에 매년 1,100만달러 ▲북한 민주화와 시장경제 도입 추진에 매년 200만달러를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북미간 협상에서 대량과괴무기 개발·판매·이전 중단뿐 아니라 북한 인권문제를 반드시 다룰 것을 제기. 한편 24일 『동아일보』는 이와 비슷한 법안이 짐 리치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아태소위위원장(공화)과 크리스 스미스 부위원장(공화), 에니 팔레오마바에가 의원(민주) 등에 의해 21일 미 하원에도 상정됐다고 보도. 다만 이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HCR)과 관계없이 미국의 난민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탈북자는 한국인으로 인정돼 난민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감안해 북한인을 한국인이 아닌 북한인으로 인정해 난민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세계일보』, 11. 22; 『동아일보』, 11. 24).

한·미·일 2차 6자회담 공동발표문 합의

12월 8일 『조선일보』는 한국·미국·일본 3국이 4~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비공식 정책협의회에서 ▲한반도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도록'하는 핵폐기의 3원칙 ▲대북 안전보장 ▲'동시행동 조치' 대신 '상호조율된 조치(coordinated steps)'로 이행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2차 6자회담 공동발표문 초안에 합의했다고 보도. 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상호조율된 조치'란 북한의 주장처럼 불가침조약과 핵시설 사찰 등을 동시조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한 뒤 상호 조치를 협의해 나가자는 의미로, 북한의 동시행동 요소도 일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설명. 아울러, 이수혁 외교부 차관보는 "3국은 공동발표문내용을 간결하고 6개국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원칙적 수준에서 담기로 했다"고 밝힘. 이에 반해 12월 9일 『중앙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우리가 핵활동을 동결하는 대신 미국에 의한 '테러지원국명단' 해제, 정치·경제·군사적 제재와 봉쇄철회, 그리고 미국과 주변나라들에 의한 중유, 전력 등 에너르기(에너지) 지원과 같은 대응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이다"라 밝히면서 이로서 "6자회담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게 될 것이다"라고 밝힘. 또한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핵활동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공짜로 동결할 수는 없다"면서 "앞으로 6자회담이 재개될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가 제기한 첫단계 조치가 합의될 수 있는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 한편 11일 『연합뉴스』는 류젠차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국, 미국, 일본이 마련한 안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정부는 11일 한·미·일 3국이 2차 6자회담 공동발표문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공식 확인(『조선일보』, 12. 8; 『중앙통신』, 12. 9; 『연합뉴스』, 12. 11).

경수로의정서 이행 불투명

12월 14일 『연합뉴스』는 10~11일 함경남도 금호부지에서 열린 북한과 한반도에

너지개발기구(KEDO)간의 고위전문가회의에서 북한이 KEDO와 맺은 의정서가 전부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14일 “북한은 경수로 공사 중단에 따른 보상을 재차 강조하면서 공사가 중단된 만큼 그동안 맺은 의정서가 전부 이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함. 특히 북한은 공사현장에 들어가기 위한 KEDO측 인력에 대해 방북 5일전 통보하던 관행 대신 20일전에 통보하고 인적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하는 등 인력의 입출국과 자재장비 반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규제할 방침임을 밝힘. 이번 회의에서 북한은 쟁점이 되어온 자재장비 반·출입 문제에 대해서도 보상전 반출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 기획단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KEDO와 북한이 서로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한도 일시중단 과정에서 보존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설명(『연합뉴스』, 12. 14).

경수로현장서 우즈베키스탄 인력 완전 철수

12월 17일 『연합뉴스』는 경수로 건설현장인 북한 함경남도 금호지구에 투입돼 근무해온 우즈베키스탄 인력 94명 전원이 이날 철수, 본국으로 귀국한다고 보도. 경수로기획단 관계자는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대북 경수로 사업 1년 중단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들은 이날 배편으로 속초항에 도착한 뒤 인천 국제공항으로 이동, 항공편으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금호지구 현장에는 지난 15일 현재 남한 인력 303명과 북한 인력 100명만이 남아 있음. 그는 또한 “우즈베키스탄 인력의 금호현장 투입은 북측이 당초 합의를 무시하고 무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 데 대해 KEDO가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언어소통 장애, 문화의 차이 등으로 당초 기대보다는 생산성이 다소 낮았으나 공사가 재개될 경우 그 유용성은 계속 있다고 본다”고 덧붙임(『연합뉴스』, 12. 17).

북한-아일랜드 외교관계 수립

12월 20일 『중앙통신』은 12월 10일 평양에서 북한과 아일랜드 간의 외교관계설정을 위한 공식회담이 진행되었다고 보도. 회담에서는 북한과 아일랜드가 서로 관련 문건들을 교환하였으며 외교관계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기초하여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합의(『중앙통신』, 12. 20).